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9.01~26.09.30)

□ 제5회 지역가치를 공동 창조하는 부동산업(*) 어워드의 모집에 대해 [9/1]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7월 발표한 '지역과 삶의 파트너' 시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부동산업자를 중심으로 지자체, 타 업종, NPO 및 지역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조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활동을 발굴·시상해 오고 있음
 - 지역과 삶의 파트너 시책은 지역 건설업 등은 평상시 인프라 유지·보수뿐 아니라 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와 제설을 전담하는 필수 기반이나,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인프라와 일상을 지탱하는 지방 중소 건설업·교통 사업자를 지원하는 종합 대책임. 적정 임금 및 공사단가 보장, DX(디지털 전환)를 통한 생산성 향상, 원활한 사업 승계 및 청년인재 유입 지원의 내용이 포함됨
 - 이러한 정책적 배경 속에서 선진적인 지역가치 공동 창조 사례의 노하우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제5회 지역 가치를 공동 창조하는 부동산업 어워드를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참가자 모집을 공표함. 특히 이번 제5회 행사부터는 시상의 훈격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국토교통대신상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영
 -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모집요강에 지정된 관할 지방정비국 등의 공식 이메일 주소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전 회차와 달리 이번 공모부터는 서류제출 자체로 참가 접수가 확정되는 방식으로 변경됨. 아울러 접수 후 사무국이 정한 기한까지 지방정비국, 지방공공단체, 부동산 관련 업계단체 중 한 곳의 추천서를 필히 제출해야 최종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됨
 - 수상자로 선정된 우수 프로젝트와 사업자는 향후 지역가치공창 산관학 플랫폼 등을 통해 선도적 모범 사례로 전국에 널리 홍보 및 발신될 예정임. 국토교통성은 부동산 업계가 단순한 부동산 중개·개발을 넘어 지역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어워드를 통해 적극 독려해 나갈 방침임
- ※ 부동산업 : 부동산 매매·임대 중개업을 지칭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부동산업은 빈집관리 및 재생, 취약계층 주거 지원, 지역상권기획까지 아우름. 단순 중개인을 넘어 유흥자산을 활용해 지역소멸을 막고 주거환경을 지키는 지역 종합재생 주체로 정의하며, 지역 건설사도 포함됨

□ 재해 시 건설기계의 위치정보 집약·활용 대처를 확충 [9/1]

- 일본 국토교통성은 대규모 재해 발생 시 피해현장 주변의 복구장비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건설기계 제조사가 보유한 텔레매틱스 데이터(위치 및 가동 정보)를 재해 대응 매니지먼트에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재해 협정을 맺은 건설업 단체 소속 약 2,000개 협력회사의 동의를 받아 수집된 중장비 위치 정보를 일본건설기계시공협회가 집약해 국토교통성에 제공하는 구조임.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재해현장의 초기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정보수집 범위를 넓히고자 이번에 참여 제조사 확대 및 적용 재해범위 확충 방안을 공식 발표함

- 이번 확충 조치에 따라 기존 4개 제조사(코마츠, 캐터필러 재팬, 코벨코건기, 히타치건기) 체제에서 스미토모건기가 새롭게 데이터 제공주체로 합류하며 총 5대 주요 중장비 제조사로 참여 폭이 대폭 확대됨
- 이와 함께 정보수집 대상 재해기준도 기존의 전국 진도 6약 이상(도쿄 23구는 진도 5강 이상) 지진이나 대규모 피해 발생 사후 시점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전 단계까지 전격 확장함
- 데이터 제공 대상 지역은 해당 재해 권역을 포함한 약 100km 사방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설정되어 가동됨
- 국토교통성은 이번 시범운용 확충을 통해 재해 발생 이후의 신속한 장비 투입뿐만 아니라 발생 직전의 사전 대비와 초동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시범 적용과정에서 도출된 성과와 실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도의 정식 본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재 인프라 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방침임

□ 1급 건축사 징계처분에 대해 [9/2]

-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축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중앙건축사심의회(8월 26일 개최) 동의에 기초하여 2명의 건축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처분을 공표함
- 1급 건축사 사와자키 코지(등록번호 제285254호)는 건축기준법을 위반한 설계로 인해 2027년 3월 1일부터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짐. 이번 징계는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핫코건설 관련 건축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대한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내려짐. 첫 번째 위반사항은 방화구조 의무누락으로,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목조건축물은 화재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과 처마 밑을 반드시 방화구조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 등의 외벽을 방화구조가 아닌 것으로 설계했음. 두 번째 위반 사항은 통로설치 의무위반임. 동일한 대지 내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1,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 이내마다 구획을 나누어 그 주위에 폭 3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채 설계를 진행했음.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정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성은 해당 건축사에게 최종적으로 1개월의 업무정지 징계를 내렸음
- 1급 건축사 카와마타 유리치(등록번호 제282150호)는 건축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위반으로 2027년 3월 1일부터 14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 이번 징계는 교토부 내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카와마타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자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했음. 해당 건축사는 건축기준법 및 교토시 건축기준조례 제32조를 위반한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구체적인 위반 사유는 자동차 차고 등의 출입구 위치 규정을 어긴 것임. 현행 조례상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교차로 측면 끝에서 7m 이내(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5m 이내)의 도로와 맞닿는 곳에는 자동차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건축사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교차로 주변에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는 부적절한 설계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최종적으로 14일간의 업무정지라는 징계 조치가 내려졌음

□ 국토교통성의 인프라 분야의 위성데이터 이용에 관한 대처방침 수립에 대해 [9/2]

- 일본 정부는 2024년도부터의 3개년을 민간위성의 활용 확대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내 스타트업 등이 제공하는 첨단 위성데이터를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 이에 발맞추어 일본 국토교통성 또한 대규모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의 조기파악 및 사회 기반시설 점검 등에 위성데이터를 도입해 왔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통합관리기준 마련이 요구되어 왔음
- 이러한 정책적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성은 지난 2026년 8월 26일 제13회 인프라 분야의 DX 추진본부를 개최하고, 인프라 영역에서의 위성 데이터 도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국토교통성 인프라 분야의 위성데이터 이용에 관한 대응 방침」을 최종 수립해 9월 2일 공식 발표함
- 이번에 수립된 대응 방침은 국토교통성 소관의 전방위 인프라 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위성 원격탐사 데이터의 실용적 활용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담고 있음. 특히 자연재해 발생 직후 신속한 현장 가시화뿐만 아니라 도로, 하천시설 등의 일상적인 상태 감시와 노후화 점검 등에 민간위성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실행 로드맵이 정리됨. 국토교통성은 이번 기본 방침의 세부 개요와 본문 자료를 공식 웹사이트에 순차적으로 게재해 국민 및 산업계에 널리 공표할 예정임
- 국토교통성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발판 삼아 우주기술을 보유한 민간 벤처기업들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인프라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임. 또한 고정밀 위성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물 유지보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방재력 및 인프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임

□ 제8회 일·ASEAN 스마트 시티·네트워크 고위급 회의 실시에 대해 [9/2]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018년 아세안(ASEAN)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제안으로 출범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11개국 38개 도시 참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다져오고 있음
- 급격한 도시화로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자국의 선진 스마트 시티 기술 및 솔루션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이번 회의 추진의 주요 배경임. 이러한 취지에서 국토교통성은 아세안 회원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양측 간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8회 일·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2026년 9월 2일 자로 공식 발표함
- 본 회의는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화요일까지 이틀간 시가현 오츠시 내 회의 시설에서 현장 대면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임. 이번 회의의 공동의장직은 일본 국토교통성과 2026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내무자치부(DILG)가 함께 맡아 회의를 주관함
- 행사에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관계자인 각국 스마트시티 담당부처 고위관료 및 도시 대표단을 비롯해 아세안 사무국, 일본 지자체, 일본 민간기업 및 유관단체 등 핵심 관계자들이 폭넓게 집결할 계획이며 일반 참관객의 방청도 허용될 예정임
- 국토교통성은 본 회의에서 양측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교통·방재·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매칭 및 실질적인 민관사업 발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임. 세부 프로그램과 참가 등록 등 행사의 구체적인 디테일은 추후 공식 채널을 통해 재차 안내될 예정임
- 일본 정부는 이번 고위급 회의 개최를 교두보 삼아 동남아 주요 도시들과의 실무 네트워크를 한층 두텁게 다지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기업들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인프라 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 **AI를 활용한 배리어 정보의 자동 추출에 관한 기술 검증 [9/3]**

- 일본 국토교통성은 보행공간의 턱이나 경사 등 장애물(배리어) 정보를 오픈 데이터화하고 이를 회피경로 안내 및 배리어프리 시설 정보제공 등에 활용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포용사회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현장조사 방식은 데이터 구축 및 갱신에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효율적인 데이터 정비 지원툴의 고도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됨
-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도로폭, 종단구배, 단차 등의 보행장애정보를 AI로 자동추출하는 기술을 현장에 구현하고 그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현지실증 참여단체 공모를 2026년 9월 3일 공식 발표함
- 이번 공모는 AI 기술을 접목한 배리어 정보 자동추출 및 데이터 구축 공정의 효율화를 실제 현장에서 실증할 지자체와 민간협력단체를 모집하는 행사로 운영됨. 제안서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3일 목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 17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세부요강과 양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됨. 공모 마감 이후 국토교통성은 10월 중순 심사를 거쳐 실증 수행단체를 최종 선정하고, 10월 하순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현장실증사업을 전개한 뒤 2027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기술검증성과를 최종 취합할 계획임
- 국토교통성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AI 자동 추출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행공간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용과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함. 나아가 검증된 최신 데이터 구축 노하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지도·내비게이션 서비스 업계에 널리 보급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임

□ **민간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대처하는 인프라 정비 사업화 검토를 지원 [9/4]**

- 일본 국토교통성은 민간의 설비투자 및 사업활동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정비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고자 지속적인 재정 지원책을 펼쳐 오고 있음
- 민간의 의사결정 시점에 맞춘 기동성 있는 지원을 통해 구상단계의 인프라 정비를 본사업 단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지역의 개성과 강점을 살린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본 제도의 추진 배경임
-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민간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프라 정비의 사업화 검토를 지원하는 「관민연계에 의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추진 지원사업(관민연계 기반정비 추진조사비)」의 2026년도 제2회 배분 대상을 최종결정하여 9월 4일 공식 발표함
- 이번 2차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로, 도시, 공원 분야의 인프라 관련 사전 타당성 및 기본설계 조사 7건이 국가지원 대상사업으로 전격 확정됨. 본 지원제도는 도로·하천·공원·시가지 정비·항만·공항 등 민간 활력과 결합된 공공기반시설 정비의 개략설계, 기초데이터 수집, 정비효과 분석 등에 소요되는 조사비용을 지자체에 최대 2분의1 이내(보조율 50% 이내)로 국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대표적인 지원대상 사례로 선정된 니이가타현 오지야시의 경우, 역세권 거점기능 향상을 위해 민간투자와 발맞추어 추진하는 '오지야역 주변 재정비 기반정비 검토조사'에 국비지원을 받아 역전광장 재정비 기초조사 및 개략 설계에 본격 착수함

- 국토교통성은 이번에 선정된 7개 조사사업을 통해 기반정비 구상이 실제 공사 및 사업단계로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집중할 방침임. 또한 민간의 선제적 투자와 공공의 인프라 구축이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된 지방도시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교류 인구를 불어넣는 성공 모델로 정착되도록 지속해서 유도해 나갈 계획임

□ 국토교통성·후생노동성의 2027년 개산 요구의 개요 [9/4]

- 일본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은 건설업 종사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약 4분의1을 차지하는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은 약 12%에 불과한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 현상에 직면해 있음. 재해 복구 등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건설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현장인재 확보가 시급하다는 배경이 크게 작용함
-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청년과 여성의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처우개선, 근로방식 개혁, 생산성 향상을 통합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건설업 인재 확보·육성을 향하여(2027년도 예산개산요구 개요)」를 공동편성하여 9월 4일 공식 발표함
- 이번 공동대응 정책은 인재확보, 인재육성, 매력적인 일터조성이라는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해 실효성을 높였음. 먼저 인재확보 분야에서는 건설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매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 사업주 대상 보조금 지원(73억 엔), 국토와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건설산업 공급력 강화(29.8억 엔), 학교와 현장을 잇는 '츠나구(연결)'화 사업(3,300만 엔) 등을 적극 반영함. 이어 인재육성 부문에서는 청년기능공 등의 조기 역량 개발을 위해 중소건설 사업주 지원 예산(4.9억 엔)과 함께 전문 교육훈련 지원을 두텁게 설계함
- 아울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확립하는 매력적인 일터조성을 위해 고용관리책임자 연수실시 예산(1.1억 엔)을 편성하고 기능공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함
-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은 부처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 또한 적정노무비 보장과 근로환경 혁신을 차질 없이 유도하여 젊은 층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매력적인 건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 차세대주택 프로젝트 2026(제1회) 결정 [9/4]

- 일본 국토교통성은 주택분야에서 첨단선도기술을 접목한 선도적(리딩) 프로젝트를 육성·지원하여 주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관련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음. 국토교통성은 조사 설계계획비용, 건설공사비, 효과검증비 등의 1/2을 보조하며, 1프로젝트 당 3억 엔을 지원함
- 이러한 정책적 배경 아래 국토교통성은 2026년도 지속가능한 건축물 등 선도사업(차세대 주택형)을 기획하고, 해당 사업에 채택된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차세대 주택 프로젝트 2026의 제1회 공모를 지난 2026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함. 공모 마감 후 학식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의 정밀 심사를 거쳐 미래주거혁신을 이끌 최종지원대상을 확정해 9월 4일 공식 발표함
- 이번 1차 공모심사 결과 총 2개 사업자의 제안 프로젝트가 모두 최종채택대상으로 결정됨. 선정된 주요사업으로는 △ 닛테츠코와부동산 주식회사의 차세대웰니스주택 프로젝트 - 주거 공간에서의 패시브 센싱과 건강 모니터링 실증실험(건강 증진 테마)과 △ MBT링크 주식회사의 혁신주택 프로젝트가 포함됨. 이들 사업은 일상적인 주거공간에 최신 센싱기술과 헬스케어 모니터링을 결합하여 거주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선도적 기술 모델을 현장에 구축·실증하게 됨

- 국토교통성은 이번에 채택된 2개 선도사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연구 및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임. 또한 실증실험을 통해 도출된 핵심 성과와 노하우를 민간 주택시장 전반에 폭넓게 보급함으로써, 차세대 주거 신기술의 사회적 실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계획임

□ 가로수 점검기술의 유효성 등의 검증을 위한 제안 모집 [9/8]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026년 3월 가로수 점검 실시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새로운 기술 활용의 방향성과 유의점을 정리했음. 배경을 바탕으로 신기술 활용을 본격적으로 촉진하고 더욱 효율적인 가로수 점검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기술의 유효성 검증 제안을 새롭게 모집함
- 이번 공모행사는 영상 및 AI 등을 활용해 가로수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상이 의심되거나 상세점검이 필요한 수목을 우선적으로 추출하는 선도적 기술발굴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음
- 행사의 공모 대상은 민간기업을 비롯해 대학, 연구기관 등이며 필요에 따라 산학연 공동 제안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 구체적인 모집 기술분야는 이미지 및 영상에 의한 가로수 상태 파악, AI를 활용한 점검 우선도 도출, 점군 데이터 및 계측기기를 통한 수목의 형상과 경사도 분석 등을 상세히 포함함. 또한 위성 및 항공 데이터를 이용한 광역적 상태파악 기술과 더불어 수종판정, 위치정보 취득, 전자대장화, 점검기록의 자동 갱신과 같은 데이터 구축 기술도 함께 수용함
- 제안서의 공식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이며, 지원자는 지정된 공모 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참여기관이 기술검증과정에서 겪게 될 인프라 확보비용 및 장소 섭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쿄 국토사무소 관내의 실제 도로공간을 검증필드로 무상 제공하여 현장실증을 보조함. 더불어 기술실증단계에서 필수적인 도쿄 국토사무소 소유의 가로수 대장 데이터 일체도 무상으로 제공하여 실물자원과 데이터 측면의 실질적인 지원을 보조할 예정임

□ 건설공사 수주동태 조사보고(2026년 7월분) [9/10]

- 2026년 7월 수주총액은 10조 9,346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은 7조 1,398억 엔(전년동월대비 1.4% 감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7,948억 엔(전년동월대비 12.3% 증가)으로 4개월 연속 증가함
- 원도급 수주액(7조 1,398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2조 1,428억 엔(전년동월대비 0.9% 증가, 3개월 만에 감소)이며, 민간으로부터가 4조 9,969억 엔(전년동월대비 1.6% 감소, 5개월 연속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7조 1,398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7,989억 엔(전년동월대비 0.9%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이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는 4조 5,000억 엔(전년동월대비 3.0%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임. 기계장치공사는 8,409억엔(전년동월대비 23.0% 감소, 3개월 연속 감소)임

□ 2025년도 부동산 증권화 실태조사 결과 공표 [9/10]

- 일본 국토교통성은 부동산 증권화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산액을 면밀히 조사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특히 이번 조사는 일반투자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반영하여 2026년 8월에 마련된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중간 정리」를 정책적 배경으로 삼아 진행되었음. 이에 따라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했으며, 투자자들의 시장동향 파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표항목을 이전보다 대폭 확충했음
-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말 기준으로 부동산 증권화의 대상이 된 부동산 및 신탁수익권의 자산 총액은 약 73.4조 엔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2025년도 한 해 동안 리츠(REITs) 및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의 대상으로 새롭게 취득된 자산규모는 약 2.8조 엔에 달했음.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양도처리된 자산액은 약 1.1조 엔을 기록하며 부동산 증권화 시장의 지속적인 자산 유동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했음
- 2025년 새롭게 취득된 부동산 증권화 자산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오피스가 0.7조엔, △숙박시설이 0.6조엔 △주택이 0.5조엔, △물류시설이 0.4조엔, △상업시설이 0.3조엔, △기타가 0.3조엔임.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쿄도가 33%, 오사카부가 7%, 카나가와현 7%, 치바현 5%, 아이치현5%, 홋카이도4%, 사이타마현4%, 후쿠오카현4%이며, 기타 도도부현이 33%임